

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2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0. .

제출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청년정책위원회 의장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시켜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 활동모임 활성화, 청년 능력개발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관련 조항 정비(안 제10조제1항)
- 나. 청년협의체 활동 경비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13조제4항)
- 다. 청년의 참여 확대 경비지원에 관한 조항 정비(안 제15조제1항)
- 라. 청년의 능력 개발 경비지원에 관한 조항 정비(안 제16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)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기간 : 2022. 9. 2. ~ 9. 22. [20일간]
-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- 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

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기여함”을 “이바지함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동법”을 “같은 법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마련 하도록”을 “마련하도록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위원장과 부위원장은”을 “위원장은 청년정책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련 업무”를 “청년정책 업무 관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한차례”를 “한 차례”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되는”을 “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개의회고”를 “개의회(開議)하고”로 한다.

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청년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
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지원 방안”을 “지원방안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기여하는”을 “이바지하는”으로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일자리경제과장 황 진 섭
	팀장 직위 · 성명	청년지원팀장 박 선 자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김 보 미 (5182-124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남시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,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,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이바지함----- -----.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청년 “의 범위는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,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.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같은 법 ----- -----.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적 환경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마련하도록 -----.
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	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위

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
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
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교육
· 경제 · 일자리 · 주택 · 복지 ·
문화 등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
한다.

③ · ④ (생 략)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
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
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
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
다.

1. ~ 3. (생 략)

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
결한다.

③ · ④ (생 략)

제13조(청년협의체 구성 · 운영)

① ~ ③ (생 략)

원장은 청년정책 담당업무 국장
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---
-----.

② -----

----- 청년
정책 업무 관련 -----.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 한 차례-----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-----
----- 해당하는 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----- 개의(開議)하고--
-----.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청년협의체 구성 · 운영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15조 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
시장은 청년의 범위, 활동분야,
참여방식 등이 다양한 청년들이
활동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
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
한다.

② (생 략)

제16조(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) ①
(생 략)
② 시장은 청년의 범위에 따라
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
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
춤형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
한다.

제17조(청년의 고용확대 등) ①
(생 략)
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
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
여야 한다.

제24조(청년단체 등의 지원) ① 시
장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

④ 청년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
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
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 -

----- 하며, 예산의 범위
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
지원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) ①
(현행과 같음)
② -----

----- 하며, 예산의 범
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
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청년의 고용확대 등) ①
(현행과 같음)
② -----
---- 지원방안-----
--.

제24조(청년단체 등의 지원) ① --

에 기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
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
있다.

② (생 략)

이바지하는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○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2항

나. 비용 발생 요인

○ 조례에 따른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고,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
및 청년명예시장제 운영

나.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총 소요액	4,660	932	932	932	932	932
취업교육 청년지원	4,500	900	900	900	900	900
청년명예시장제 운영	160	32	32	32	32	32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○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필요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(황진섭)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청년기본법」

제14조(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(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9조(청년 능력개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·재능·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